

# ‘이준석 가처분’ 결론 임박... 與 조기 전대설 ‘모락모락’

### 이준석, 두번째 심리 참석... 법원, 이르면 다음주 결과 발표 이 대표 승리시 조기 전대 현실화... 내년 1·2월 → 연내 가능성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28일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경장에 돌입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1시간30여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이르면 다음 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번째 심문이고,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에서 새로 임명

된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만 정우택·정진석·권성동·김기현·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으로 두 번째 비대위마저 좌초된다면, ‘3차 비대위’를 추진하기보다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어가는 한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 차기 지도부 정비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 1~2월로 당내 공감대를 이뤄가던 전당대회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 당내에 선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약 50일 가량으로 가능하고 있다. ‘연내 전당대회’ 시나리오엔 당권주자 중 김기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 직후부터 ‘비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해왔다. 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비해 당심과 민심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남·대구·서울·제주·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당심 표발감에 열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대구시장 요청으로 당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MBC 때리기’에 앞장서며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정치입문 10주년 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뒤 연일 사회관계자서비스(SNS)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입구도 못 들어간 ‘MBC 항의 방문’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광복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의도 브리핑

### “소방관 보호복 75.7%가 사용기한 초과”

#### 이형석 의원 국감 자료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지만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을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시장, 울산, 울산,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소방서)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가운데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을 총 337벌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보호복의 경우 전체 146벌 중 75.3%에



달하는 110벌이 내용연수 기간을 경과했고 화학 보호복(레벨A)의 경우 전체 191벌 중 75.9%에 달하는 145벌이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또 방사선 피폭 선량계를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내용연수 10년) 역시 전체 204개 중 32.8%인 67개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이형석 의원은 “현재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대응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소방청은 노후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 소방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송정역 평균 임대수수료, 서울 용산역 1.5배”

#### 조오섭 의원 국감 자료

광주송정역의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 국회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 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억(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를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野 ‘박진 경질’ 총공세

### 민주, 외교부 장관 해임안 발의 “72시간 내 표결, 의장 재량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 압박하고 대통령 거부권 대비 여론전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조건으로 여야의 의사 일정 협의를 내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전도 폈다.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해 만에 하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에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이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여론전에도 불을 지폈다. 진 수석은 “여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모두 6번 통과됐고, 그중 5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169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상정만 된다면 본회의 가결은 떼어놓은 당상으로 보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150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당내 일각에서는 정의당(6명), 무소속·기본소득당·시대전환(9명)에 국민의힘 내부 ‘반란파’까지 가세할 경우 찬성표가 최대 200표까지 이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정연유착 프레임에도 정면 대응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와 민주당간 ‘사건 공보’ 가능성을 제기한 자 이 사안을 모면하려는 수작”이라며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SNS를 통해 (비속어 논란 영상)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